



판문점 회담장 장식한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 청와대가 25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단장 한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을 장식한 미술품을 공개 했다. 사진은 신장식 작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 (사진=청와대 제공)

# “국회 주도 개헌 반드시 성사시켜야”

### 김광수 의원 등 '야3당 개헌연대' 개헌·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반 개헌 세력, 국민 심판 받을 것”

민주평화당 한정특위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25일 국회에서 야3당 개헌연대 공동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야3당(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한정특위 위원장 및 간사를 주축으로 하는 '야3당 개헌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자”고 촉구했다.

“야3당 개헌연대”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 기회가 거대야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며, 개헌 판을 닫으려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반 개헌 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6월 개헌 무산 발언에서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은 물론,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 협상의 발목을 잡은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제 거대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당초 동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 가동을 통해 개헌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을 이뤄야 한

다.”고 밝히며 “국회가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열망을 더 큰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성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야3당 개헌연대 기자회견'에는 천정배, 김동철, 노회찬 의원 등 야3당 대표를 비롯해 김광수, 김관영, 심상정 한정특위 위원장 및 간사가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성사를 위한 거대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 6.13 지선 도내 민주당 후보 결정 군산 강임준·무주 백경태·고창 박우정

6월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산과 무주, 고창에 출마할 후보들이 결정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산 시장과 무주군수, 고창군수 등 3개 지역 단체장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와 안심번호 선정인단 ARS의 결과(집계)를 종합했다. 경선 결과 먼저 군산시장은 강임준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문택구 후보가 2위를 차지했다. 무주군수는 백경태 후보가 현 군수인 황정수 후보를 따돌리고 본선에 진출했다. 고창군수 후보는 현 박우정 군수가 정명식, 이호근 후보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김진성 기자

# “지방의회 권한·지위 강화로 지방정부 장 견제해야”

### 전북도의회 주관,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지방정부의 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25일 전라북도의회가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마련한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신기현 전북대학교수가 제기했다. 신 교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의 경우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시대 변화에 맞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의회직렬 신설 및 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

동 활용이 가능한 보좌관제도부터 경비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주도의회와 국회 등의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을 추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겸직 제한과 의회 스스로의 기본조례 제정 등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주민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 내용을 보여주고 공표하며 평가 받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전라북도의회 과제로 의정 활동 강화와 해외연수 개선, 소규모주민자치원사업비 투명성 보장, 정책보좌 인력 확

대, 사무처에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신기현 전북대교수가 발제했으며, 국주영은 도의원, 김재호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민형배 전 광주시 광산구청장,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대 전 전북민선연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앞서 양용모 의장은 “정부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지방분권형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사명”이라며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시민사회, 그리고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MB 집사' 김백준 보석 신청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고 방조범으로 기소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는 재판부 의견에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며 보석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에 현금으로 각 2억원씩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석심문기일은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쳐 김 전 기획관의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뉴스

## 유성엽,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 토론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활동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평화당, 정읍,고창)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교문위(유성엽, 김한정, 노용래, 박경미, 오영훈, 장정숙, 조승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공동주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의 일환으로 문화권의 헌법 개정 의제 포함의 필요성과 문화예술관련 법률 및 연관법률의 개정 사항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송경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총괄간사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의 현재와 후속대책'을 주제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김진성 기자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